



대학의 자율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은 양립할 수 없는가



윤형섭
호남대 총장

“총통 각하,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온 저희들 대학 총장단은 지난 이틀 동안 세 나라의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중국문화대학의 장경호 이사장과 임채매 총장의 뛰어난 조직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체로 합의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첫째로 어떠한 이유로도 대학의 자율권은 침해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마땅히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 셋째,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유가 되어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넷째, 위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이 현재 입안 중에 있다는 중화민국 사립학교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석자 모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세 나라 공히 약 75% 안팎의 학생을 사학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당연한 의무 이행이며, 사립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 측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권 보장과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마땅히 양립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통 각하의 각별한 배려와 후원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은 지난 11월 5, 6일 양일간 중국문화대학에서 개최된 ‘중·일·한 사학 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끝낸 다음날, 천수이벤 중화민국 총통을 예방한 자리에서 본인이 일행을 대변했던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요약한 것이다. 총통께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총장님들의 토론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사립학교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하겠습니다.”고 지극히 긍정적인 반응과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세 나라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논문과 토론을 통해서 ‘학교 운영의 자율화와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심포지엄의 첫째 날 본인은 주제 논문을 통해서, ‘대학의 자율화란 대학이 정부의 일방적인 간섭과 통제에서

“

75% 인밖의 학생을 사학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당연한 의무 이행이며, 사립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 측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벗어나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내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스스로 감수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야만 대학들은 자율화 → 특성화 → 다양화 → 경쟁력 강화 등의 순차적 변신을 거쳐 국가의 대외경쟁력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엄존한다면 대학은 예측화 → 획일화 → 서열화 → 경쟁력 약화 등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 대외경쟁력 증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와 대학은 서로 각자의 기능과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서로 원만한 협력과 보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입을 모아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러한 기본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희대 조정원 총장은 한국의 4년제 사립대학은 147개교로 총 193개 대학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학에 대한 국고 지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국고 지원율이 대학 운영 수입의 19%, 영국이 35%, 일본이 13%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4.7%는 한국 사학의 재정적 열악성과 정부의 무책임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GDP 대비 대학 지원 비율을 보건대 OECD 국가의 평균이 1%임에 비해서 한국은 0.43%로써 결과적으로는 사립대학 운영 수입의 68.1%를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사립대학의 총 운영 수입 6조 4,577억 원 중 학부모의 부담액수가 총 4조 4,007억 원 임에 비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액수는 3,05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하여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은 하는 수 없이 자체 조달 방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으며, 숙명여대의 모금 성공 사례를 열거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국고 지원의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장은 보다 안정적인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하여 대학 지원 예산을 법적 교부금으로 확보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국가의 법적 의무가 되고 이는 역으로 대학의 권리조항이 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권이 전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점에 관해서 오직 한사람, 일본 헤이세이 대학의 나까무라 총장만이 게이오 대학 창설자 후꾸자와 유키찌의 자주·자존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 곧 예측을 자초하게 된다며 반론을 제기한 일이 있다. 그러나 세 나라에서 온 그 밖의 모든 총장들은 “대학의 자율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은 훌륭히 양립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인은 중화민국 총통께 했던 건의를 대한민국 정부 수반에게도 그대로 되풀이하는 바이다. **한**